



# 사회복지법제

김정훈교수



#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운영 교.강사명	김정훈	학점/ 이수시간	3학점/ 15주(45시간)
수업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를 법적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차원에서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복지법 실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무 업무 시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등을 헌법과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법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적인 사회복지법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사회복지법 적용능력을 제고시킨다. 6. 또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판례를 적절히 소개하여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6.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하여,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7.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추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인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간고사 : 25%, 기말고사 : 25%, 과제물 : 20%, 출석 : 15%, 토론 : 5%, 수업참여도(생각해보기, 오늘의 미션 등) : 10%				
성적분포	총점 90점 이상(A~A+) : 총 정원의 20%이하 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B~B+) : 총 정원의 40% 이하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C~C+) : 총 정원의 30% 이하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D~D+) : 총 정원의 10% 이하 ※ 총점 60점 미만, 출석률 80% 미만은 과점 수료 불가(자동 F 처리)				
교재	주교재 : 홍봉수, 임안나, 김정훈 외 8인(2015),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부교재 : 현외성(201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학습자료
1주차	1차시	1) 강의제목: 사회복지법의 학습개요 및 개관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학습개요와 개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체계 -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일본 사회복지법의 체계 -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3) 사회복지법의 법원 - 개념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4) 사회복지법의 유형 및 요소 - 입법배경 - 사회보장제도적 장치			진도범위 주교재 : 1~4장
	2차시	1) 강의제목: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해 알고 역사적 전개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진도범위 주교재 : 2장

		<p>(1) <b>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권의 의의</li> <li>- 생존권 이념의 형성</li> <li>-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li> </ul> <p>(2) <b>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li> <li>- 법적 규정</li> <li>- 법정 규정에 대한 검토</li> </ul> <p>(3) <b>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li> <li>- 사회복지법의 전망</li> <li>-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li> </ul> <p>(4) <b>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li> </ul>	
2주차	1차시	<p>1) 강의제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p> <p>2) 강의주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 습득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b>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성립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li> <li>-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li> </ul> <p>(2) <b>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구조의 의의</li> <li>-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li> </ul> <p>(3) <b>수급권의 보호와 제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li> <li>-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li> <li>-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li> </ul>	진도범위 주교재 : 7장
	2차시	<p>1) 강의제목: 사회보장법 및 사회보험법</p> <p>2) 강의주제: 사회보장법의 의미와 사회보험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b>사회보장법의 의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법</li> <li>- 사회보장</li> <li>- 사회보장기본법</li> </ul> <p>(2) <b>사회보장법의 내용</b></p> <p>(3) <b>사회보장법의 특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li> <li>-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방법</li> <li>-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li> </ul> <p>(4) <b>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b></p> <p>(5) <b>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연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배경</li> <li>- 연혁</li> </ul> <p>(6) <b>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과 기본이념</li> <li>-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li> <li>- 사회보장의 대상</li> <l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li> <li>- 사회보장심의위원회</li> <li>-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li> <li>- 사회보장제도의 운영</li> <li>- 권리구제</li> </ul>	진도범위 주교재 : 7장
3주차	1차시	<p>1) 강의제목: 국민연금법1</p> <p>2) 강의주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알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b>국민연금법 총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관장</li> <li>- 용어 정의</li> </ul>	진도범위 주교재 : 1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의 의미</li> <li>- 국민연금의 특성</li> <li>- 입법배경</li> </ul> <p><b>(2) 국민연금법의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li> </ul>	
	2차시	<p><b>1) 강의제목: 국민연금법2</b></p> <p><b>2) 강의주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알 수 있다.</b></p> <p><b>3) 강의세부내용</b></p> <p><b>(1) 급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통칙</li> <li>- 수급요건과 급여수준</li> </ul> <p><b>(2)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연금</li> <li>- 장애연금</li> <li>- 유족연금</li> <li>- 분할연금</li> <li>- 반환일시금</li> </ul> <p><b>(3)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li> <li>- 연금 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li> <li>- 연금급여의 지급정지</li> </ul> <p><b>(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li> <li>- 연금 보험료의 징수</li> <li>- 연금 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기한</li> <li>- 연금 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li> <li>- 연체금 등</li> <li>-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li> </ul> <p><b>(5) 국민연금기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기금</li> </ul> <p><b>(6)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청구</li> <li>- 국민연금심사위원회</li> <li>- 재심사 청구</li> </ul> <p><b>(7) 보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중복급여의 조정</li> <li>- 대위권 등</li> <li>- 시효</li> <li>-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li> </ul>	<p><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p> <p><b>참고논문</b> [국민연금제도 발전의 동치적 동학], 진희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p>
4주차	1차시	<p><b>1) 강의제목: 국민건강보험법1</b></p> <p><b>2) 강의주제: 국민건강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b></p> <p><b>3) 강의세부내용</b></p> <p><b>(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li> <li>- 목적</li> <li>- 국민건강보험법</li> <li>-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li> </ul> <p><b>(2) 국민건강보험가입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li> </ul> <p><b>(3)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의 종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li> </ul> <p><b>(4)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과 상실</b></p> <p><b>(5) 국민건강보험법 운영 조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조직</li> <li>-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li> </ul> <p><b>(6)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li> </ul>	<p><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p>
	2차시	<p><b>1) 강의제목: 국민건강보험법2</b></p> <p><b>2) 강의주제: 국민건강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b></p> <p><b>3) 강의세부내용</b></p>	<p><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p>

		<p>(1) 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및 국고보조</li> </ul> <p>(2)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li> </ul> <p>(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li> <li>- 심사청구</li> <li>- 행정소송</li> </ul>	
5주차	1차시	<p>1) 강의제목: 산재보험법1</p> <p>2) 강의주제: 산재보험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산재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li> <li>- 산재보험의 특성</li> </ul> <p>(2) 입법배경</p> <p>(3) 산재보험의 총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총칙</li> </ul> <p>(4) 근로복지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설립</li> <li>- 공단의 사업의 수행업무</li> <li>-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li> <li>-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li> </ul> <p>(5) 보험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li> <li>- 보험급여</li> </ul>	<p>진도범위 주교재 : 10장</p>
	2차시	<p>1) 강의제목: 산재보험법2</p> <p>2) 강의주제: 산재보험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급여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li> <li>- 휴업급여</li> <li>- 장해급여</li> <li>- 간병급여</li> <li>- 유족급여</li> <li>- 상병보상연금</li> <li>- 장의비</li> <li>- 직업재활급여</li> <li>- 장해특별급여와 유족</li> </ul> <p>(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의 산정기준</li> </ul> <p>(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이익의 징수와 부당이익의 환수</li> <li>-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li> </ul> <p>(4) 산재보험의 보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li> </ul>	<p>진도범위 주교재 : 10장</p> <p>참고논문 [산재보험과 국세의 권리구제제도의 비교 연구], 서정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p>
6주차	1차시	<p>1) 강의제목: 고용보험법1</p> <p>2) 강의주제: 고용보험법에 대해 알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고용보험법의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과 고용문제</li> <li>- 고용보험제도</li> <li>- 고용보험법의 목적</li> <li>- 고용보험법의 특성</li> </ul> <p>(2) 입법배경과 연혁</p> <p>(3) 적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사업장</li> <li>- 적용 제외 근로자</li> </ul> <p>(4) 보험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li> </ul>	<p>진도범위 주교재 : 10장</p>

		<b>(5) 보험관계</b> <b>(6) 관장기관: 보험자</b> <b>(7) 피보험자의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격의 취득일</li> <li>- 피보험자격의 상실일</li> <li>-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li> <li>- 피보험자격의 확인</li> <li>-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li> </ul>	
	2차시	<b>1) 강의제목: 고용보험법2</b> <b>2) 강의주제: 고용보험법에 대해 알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p><b>(1) 보험급여의 종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안정사업</li> <li>- 직업능력개발사업</li> <li>- 실업급여</li> <li>- 육아휴직급여</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li> <li>- 산전후 휴가급여</li> </ul> <p><b>(2) 권리구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및 재심사</li> <li>- 보정 및 각하</li> <li>- 심사관의 권한</li> <li>- 고용보험심사위원회</li> <li>- 재심사의 상대방</li> </ul> <p><b>(3) 보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이익 처우 금지</li> <li>- 소멸시효</li> <li>- 포상금의 지급 제도</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
		<p style="text-align: center;"><b>☒ 과제/토론출제 ☒</b></p> <p>※ 과제물 제출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량 A4 3매, 글씨 크기 10.0으로 통일</li> <li>2) 과제는 hwp(한글), doc, docx(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li> <li>3) 파일명, 본문에 학습자 성함과 과목명을 반드시 기입</li> <li>4) 제출기한 초과 시 제출 불가하므로 제출기한 확인(기한 내 수정/재업로드 가능)</li> <li>5)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같은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왔을 시 같은 답안 제출자 모두 0점</li> <li>- 분량(10포인트 기준 A4 2매)이 90% 이하인 경우 감점</li> <li>- 참고문헌 미포함시 감점</li> <li>- 인터넷 검색자료를 복사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 감점</li> <li>- 필수 기재사항(성명, 과목명) 미기재시 감점</li> </ul> </li> </ol> <p>※ 주의 : 타인의 과제를 도용할 경우(모사답안) 0점 처리함</p>	<p>○ <u>과제</u> ○  <b>10주차</b>  <u>종료일까지</u></p> <p>○ <u>토론</u> ○  <b>11주차</b>  <u>종료일까지</u></p>
<b>7주차</b>	1차시	<b>1) 강의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1</b> <b>2) 강의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p><b>(1) 의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 문제</li> <li>-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li> </ul> <p><b>(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기본이념, 특성</li> </ul> <p><b>(3) 입법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li> <li>- 총칙</li> <li>- 장기요양인정</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
	2차시	<b>1) 강의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2</b> <b>2) 강의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p><b>(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급여</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1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li> </ul> <p><b>(2) 장기요양 이용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 이용절차</li> <li>- 장기요양등급</li> </ul> <p><b>(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시기</li> <li>- 월한도액</li> <li>- 급여의 제한</li> </ul> <p><b>(4) 장기요양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기관</li> </ul> <p><b>(5)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b></p>	
<b>8주차</b>	-	<p style="text-align: center;">☒ 중간고사 ☒</p> <p>1) 시험범위 : 1주~7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1점), 주관식 5문항(각1점) 25점 만점  3) 시험시간 60분  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함.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음.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p>	-
<b>9주차</b>	1차시	<p><b>1) 강의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1</b>  <b>2) 강의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공공부조법의 개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조법의 개념과 목적, 원칙</li> <li>- 공공부조법의 특성</li> </ul> <b>(2) 국민기초생활보장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문제와 사회복지</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li> </ul> <b>(3) 입법배경과 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배경</li> <li>- 연혁</li> </ul> <b>(4) 급여의 기본원칙</b>  <b>(5) 급여실시의 기준</b>  <b>(6) 수급권자와 수급자</b></p>	진도범위 주교재 : 9장
	2차시	<p><b>1) 강의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b>  <b>2) 강의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국민기초생활보장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기관</li> <li>- 생활보장위원회</li> </ul> <b>(2) 급여의 종류와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li> <li>- 급여의 종류</li> </ul> <b>(3) 급여의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의 신청</li> <li>- 신청에 의한 조사</li> <li>- 확인조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li> <li>- 급여의 결정, 실시, 변경, 중지</li> </ul> <b>(4) 보장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li> <l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li> <li>- 교부 및 반납</li> <li>- 보장기금의 적립</li> <li>- 비용의 징수</li> <li>- 반환명령</li> </ul> <b>(5) 권리구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li> <li>- 보장비용</li> </ul> </p>	진도범위 주교재 : 9장
<b>10주차</b>	1차시	<b>1) 강의제목: 의료급여법1</b>	진도범위

11주차		<p>2) 강의주제: 의료급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의료급여법의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li> <li>-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li> <li>- 입법배경</li> </ul> <p>(2)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적용대상, 수급권자</li> <li>- 난민에 대한 특례</li> </ul> <p>(3) 의료급여법의 수행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기관</li> <li>- 의료급여심사위원회</li> <li>-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관</li> <li>- 급여비용</li> </ul> <p>(4)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p> <p>(5) 실시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기관</li> <li>- 의료급여기관</li> <li>-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li> </ul>	주교재 : 9장
	2차시	<p>1) 강의제목: 의료급여법2</p> <p>2) 강의주제: 의료급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의료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의 내용</li> <li>-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li> </ul> <p>(2) 의료급여기간</p> <p>(3) 급여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차이</li> <li>- 진료범위</li> <li>- 급여비용의 부담</li> <l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li> <li>-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li> <li>- 의료급여기금</li> <li>- 의료급여의 제한</li> <li>- 수급권의 보호</li> <l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li> <li>- 이의신청</li> <li>- 기금설치운영 및 감독</li> </ul> <p>(4) 문제점과 개선방향</p>	<p>진도범위</p> <p>주교재 : 9장</p> <p>- 과제 제출 -</p>
	1차시	<p>1) 강의제목: 사회복지사업법</p> <p>2) 강의주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과 범위, 특성</li> </ul> <p>(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배경</p> <p>(3)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사항</li> <li>- 사회복지전달체계</li> <li>- 사회복지 인력</li> <li>- 사회복지법인</li> <li>- 사회복지시설</li> <li>- 기타</li> </ul>	<p>진도범위</p> <p>주교재 : 9장</p>
	2차시	<p>1) 강의제목: 아동복지법</p> <p>2) 강의주제: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다.</p> <p>3) 강의세부내용</p> <p>(1)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사회의 아동문제</li> <li>- 아동복지의 특성과 목적</li> </ul> <p>(2) 입법 배경 및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배경</li> </ul>	<p>진도범위</p> <p>주교재 : 8장</p> <p>- 토론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연혁</li> <li>- 법의 내용</li> </ul>	
12주차	1차시	<b>1) 강의제목: 노인복지법</b> <b>2) 강의주제: 노인복지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의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li> <li>-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li> </ul> <b>(2) 입법배경</b> <b>(3)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li> <li>- 보건복지조치</li> <li>-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8장
	2차시	<b>1) 강의제목: 장애인복지법</b> <b>2) 강의주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의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문제</li> <li>-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복지법</li> <li>- 장애인복지법의 목적</li> </ul> <b>(2) 입법배경</b> <b>(3)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의 내용</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8장
13주차	1차시	<b>1) 강의제목: 한부모가정 지원법</b> <b>2) 강의주제: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대해 알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의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정의 문제</li> <li>- 한부모 가정의 개념</li> </ul> <b>(2) 입법배경</b> <b>(3)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지원법의 목적과 기본원칙</li> <li>- 적용대상</li> <li>- 실시기관</li> <li>- 복지조치</li> <li>- 한부모가족 복지시설</li> <li>- 비용</li> <li>-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 청구</li> </ul> <b>(4) 문제점과 개선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 강화</li> <li>- 복지자금의 효율적인 운영</li> <li>-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8장
	2차시	<b>1) 강의제목: 영유아보육법</b> <b>2) 강의주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의의</b> <b>(2) 입법배경</b> <b>(3)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책임주체와 대상자</li> <li>- 전달체계의 구성</li> <li>- 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li> <li>-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종류</li> <li>- 보육시설 종사자</li> <li>- 비용</li> <li>- 지도 및 감독에 관련된 법 조항</li> </ul>	<b>진도범위</b> 주교재 : 8장  <b>참고논문</b> [유보통합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비교연구], 장신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14주차	1차시	<b>1) 강의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b> <b>2) 강의주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대해 알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진도범위</b> 주교재 : 11장

		<b>(1) 의의와 입법 배경</b> - 의의 - 입법 배경 <b>(2) 목적</b> <b>(3) 내용</b>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및 책임주체 -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도 감독 및 지원 - 적용 완화와 편의 제공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 이행강제금	
	2차시	<b>1) 강의제목: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b> <b>2) 강의주제: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b> <b>3) 강의세부내용</b> <b>(1) 의의와 입법배경</b> - 의의 - 입법배경 <b>(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련된 법의 근본적인 목적</b> <b>(3) 내용</b> - 책임주체 - 사회복지서비스 차원 - 가정폭력에 관련된 복지시설 - 금지 사항	<b>진도범위</b> 주교재 : 11장
15주차		<p style="text-align: center;">☒ 기말고사 ☒</p> 1) 시험범위 : 9주~14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1점), 주관식 5문항(각1점) 25점 만점 3) 시험시간 60분 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함.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음.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 기말고사 성적 공개 (성적이의신청기간 시)</p>	-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에 대한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다.

###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이다.
- 사회복지입법은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로 표현되는 제방 사회서비스가 포함한다.

####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구빈)
- 사회복지의 개념의 대상과 문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 문제의 발생이라고 말하는 거시적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의 사회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 (3)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학문적 :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  
실정법상 :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선호

## 2. 사회복지법의 체계

###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분설 :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 보상, 원호나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와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한다.
- 2분설 :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또는 특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한다.

####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는 방법

## 사회복지법제

### 1-1 사회복지법의 학습개요 및 개관

####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

#### ▷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원리	내용
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겐 생활의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
보상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법</li> <li>-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예를 들면 군경, 기타 국가유공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본인이나 유족들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공익을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방 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li> </ul>
원호의 원리	개인의 일정하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켜줄 목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

## 2) 일본 사회복지법의 체계

###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 사회복지 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 서비스 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 생활보호, 아동복지, 모자복지, 정신박약자복지, 노인복지, 매춘방지, 재해구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2) 편제에 따른 분류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휴생성설치법 지방자치법 민생위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법 : 일반적인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부조법, 구조법, 육성법, 갱생법</li> <li>• 원조법 :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립 조장의 목적으로 급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공익저당법, 모자복지법</li> <li>• 원호법 :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 손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li> </ul>

### (3) 욕구의 충족에 대한 분류

- ▷ 비화폐를 주로 하는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청소년복지법, 근로부인복지법, 피폭자의료법, 공해건강피해자구제법 등
- ▷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 아동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 3)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 (1) 사회보장법

- ▷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미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 (2) 사회복지 관련법

- ▷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의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등
- ▷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 ▷ 노동 및 고용과 연관된 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등
- ▷ 고용관련법 : 특수교육, 의무교육,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
- ▷ 재활과 연관된 법 :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 3. 사회복지법의 법원

#### 1) 개념

-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서비스의 내용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련,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 헌법 :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 ▷ 법률 :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 관습 :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 ▷ 법률 : 법원이 내의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 ▷ 명령 : 관습법과 판례법 없는 경우에도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

#### 4. 사회복지법의 유형 및 요소

##### 1) 입법배경

- 1955년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이 설립되어, 동병원에서 1959년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1959년 10월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모여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으로서 의료보험, 실업 및 노동재해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를 하달
- 1963년 10월 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와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 2) 사회보장제도적 장치

######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험의 예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다.

######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의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 있다.

###### (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예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이 있다.

(4) 관련 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이다.
- 관련 복지제도의 예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들 수 있다.

##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1) 생존권의 의의

-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을 지닌다.
-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다.

###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 (1) 시민법과 자유권

- 시민법 체계, 자유권의 이념은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부의 불평이 일어났다.
- 시민법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생존권 대두되었다.

#### (2) 시민법과 노동법

-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한다.

####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
- 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요보호 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이다.
-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을 들 수 있다.

#### (4) 사회복지사업법과 생존권

- 자립 상실자나 비자립자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다.

#### ▷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생존권의 특징

- ① 미성숙자, 노인, 심신장애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통한 자립상실자 혹은 비자립자의 시민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 ② 국가적, 공적, 사적보호법(민법)의 총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의 보장을 국가적, 공적, 사적보호법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 ③ 대상자는 사회제도, 조직 등으로부터 이탈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인 환경도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방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상자의 생존권보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사회사업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생존권의 실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 ④ 사회복지법의 대상은 생활상의 약자라는 관점에서 생존권의 보전, 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1) 국제인권규약

-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 및 원조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가정)에 대해서 주어져야 하며 특히 가족의 형성과 부양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산전·산후의 합리적인 기간에 특별한 보호가 산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 일하는 산모에게는 그 기간에 유급휴가 또는 상당한 사회보장급여를 수반하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보호 및 원조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출생 기타의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연소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아동과 연소자를, 그 정신 또는 건강에 유해하며 그 생명에 위험이 있으며 또는 그의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 국가는 연령 제한을 두어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

#### (2) ILO

- 사회보장(협회의 소득보장을 의미)에 관한 각종 중요한 조약이나 권고를 채택한다.
- 이러한 조약이나 권고는 그 조약의 비준에 의한 국내법화를 거쳐서 비준국가의 사회보장법과 행정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ILO 102호 조약 1952년) 「모성보호조약」(ILO 103호 조약 1952년) 「산업재해·직업병급여에 관한 조약」(ILO 121호 조약 1964년)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ILO 128호 조약 1967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ILO 130호 조약 1969년) 등이 있다.

## 2.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 (1) 인간다운 생활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표현된다.

#### (2) 사회복지의 증진

-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 (3) 자활, 자립

-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 삶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 (4) 소득재분배

- 소득의 재분배라는 실천 목표 혹은 이념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법의 실천 이념 혹은 목표이다.

#### (5) 사회통합

-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대처의 사회통합, 사회연대원리이다.
- (6)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 생존권의 보상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화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된다.

## 2) 법적 규정

### (1) 헌법

- 헌법에서 생존권에 관련된 규정 : 헌법 전문을 비롯한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

### (2) 사회복지법

- 개별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 특정한 기본욕구나 각각의 사회생활문제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법 = 소득욕구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욕구
- 공공부조법 = 빈곤문제
- 사회복지사업법 = 심리사회적 문제

#### ①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 ②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킨다.
-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고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③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
- 의료급여법은 위와 동일한 자에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④ 아동복지서비스법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행복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육성·고용의 증진·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⑤ 사회복지관계법

- 환경관계법은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한다.
- 주택관계법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 임금·고용관계법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3) 법정 규정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수익권이다.

○ 반사적 수익권

- 아동, 모자, 심신장애자, 노인, 저소득자 등 생활상의 원호·육성·갱생 기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서비스청구권(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의 권리이다.
-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법적인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과 복지 예산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 산업사회의 발전은 점차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내용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하여 여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내용도 변화하게 된다.
- 역사적 진화과정에 따라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이념이 복합적으로 생성되어 왔다.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생활상의 문제구조와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되어 여기에 대처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내용도 변화하게 된다.

2) 사회복지법의 전망

- 사회변동에 따라 생활상의 문제구조와 내용이 복잡해지고 포괄적이 됨과 동시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권의 이념이 계속 확대·발전될 것이다.
-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두드러짐으로써 사회복지법 이념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다.
- 새로운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 출현이 가속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법제가 한층 강화되어 구체적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 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1) 초기

- 노동자 및 그 가족과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빈곤자,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제의 2가지 핵심적 대상이다.

#### (2) 현재

- 전체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라는 대상 면의 확대 및 변화되었다.
- 직접적·구체적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간접적·추상적·사회 환경적 성격을 띤 생활상의 문제로 변천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 4.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한국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으로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입법이 지속해서 제정되었다.
- 사회복지법이 형식적 체계는 갖추었으나, 내용 면에는 임의조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사회복지입법 역사는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해방 후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론에서 점진적으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있다.
- 적용대상에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었다.
- 형성과정에서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의 활성화,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출현하였다.
- 탈산업화,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2) 과제

-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 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소송 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 외국인 노동자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통일에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의 조정,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 입법 필요하다.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1) 시민사회 성립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1)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개별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 특정한 기본욕구나 각각의 사회생활문제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법 = 소득욕구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욕구
  - 공공부조법 = 빈곤문제
  - 사회복지사업법 = 심리사회적 문제
- 
-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는 대부분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 그 해결책 역시 개인을 교화시키거나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훈육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였다.
  - 이 시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구빈법적인 억압의 요소를 지니기 일쑤였으며, 사회복지의 대상은 소수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주어진다.
  - 시민사회의 법적 자유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계층은 자유의 이름으로 부자유를 강제 당하게 된다.
  - 실업, 재해, 상병 등 생활상의 사고나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는 이미 자력으로써 대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빈곤화가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의 필연적 결과로 인식됨으로써, 빈곤의 사회상이 자각되게 이른 것이다.
  - 자본주의를 수행하여 그 모순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한 순수한 시민 사회생활에 속하지도 않고, 동시에 순수한 국가생활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형태의 인간생활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사회법의 한 영역으로써 전 국민의 복지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그 이념과 원리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활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 국민의 생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혹은 복지권을 핵심으로 삼고있다.
  -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개념은 인간으로서 생존 혹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수급권은 결국 생존권 혹은 복지권을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개의 권리와 내용을 파악한다.
  - 현대국가는 대부분 헌법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며 그것을 이어받은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 프로그램 규정설

-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이다.
-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없다.

○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거

- 생존권 :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재력 특히, 그 재정적 혹은 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력이 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 방침이나 사회 국가적 원리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 : 생존권을 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이다.

(2)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 생존권과 같이 처음부터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지 아니한 권리가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
- 자본주의 경제가 반드시 생존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 생존권의 경우 그 보장 수단이 없다는 점은 생존권이 권리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다.
-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헌법상의 규정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실천목표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 그 방법이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제적 권리

- 실제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다.
-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생활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예로는 각종 사회보험률에 따른 사회보험 청구권, 공적부조법률에 따른 공적부조 청구권,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따른 사회복지조치와 청구권이 있다.

(2)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급여는 복지대상자의 신청 후 사회복지 행정기관에서 조사, 사정을 진행하고, 수급범위와 수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사회복지 급여는 금전적인 급여와 비금전적인 급여가 합하여진 것이다.
-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 사회복지대상자의 수속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

- ① 사회복지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그 수단으로서 TV, 라디오, 광고지, 신문, 포스터, 영화 등에 의한 PR 등의 정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내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의무를 지닌다.

▷ 수속 단계에서의 권리

- 신청단계, 조사단계, 결정단계,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와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권리이다.

### 3.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미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권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현대 복지 국가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 이념으로서 실천되나 그 구체적 효과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급여행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연구와 정책결정자나 관료 및 국민의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가 약화하는 점을 지니게 된다.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현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
- 현대 산업사회에서 국민 개인의 사회생활상에 직면하는 생활문제가 사회성과 보편성을 지닌다는 인식과 이해가 될 때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사적측면의 공적 측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권리의 지위를 공고히 가지게 될 것이다.

#### (5) 수급권과 행정조치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이 있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 구체적 법률을 통하여 사회복지급여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성격과 함께 사회권으로서 공적권리로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는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게 된다.

- ① 수급권의 처분 혹은 압류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처분(양도, 담보 제공), 압류 및 상계금지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특히 금전급여의 형태를 취할 때 그 가치는 객관화될 수 있다.
- ② 조세·기타 공과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불이익의 변경 금지 :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 요보호 상태가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때문에 상태가 악화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와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①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사회복지 급여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조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도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아야 하며, 중복된 급여를 지양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①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 현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이거나 혹은 아니라도 특정의 고의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가지게 될 때 이에 대해 수급권을 제한한다.
- 목적 있는 자해행위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행위이다.
- 고의의 범죄행위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의 범죄행위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의 발생을 배제한다.
- 고의행위는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발생의 배제 사유이다.

② 과실 있는 행위

- 중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 규정하고 있다.

③ 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

- 사기 또는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사회복지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④ 사회복지급여의 병급금지 또는 조정

-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 혹은 법률로 규정한다.

#### (2) 사회보장

-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봉착하는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에 확보를 전제로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의 하나이다.

#### (3) 사회보장기본법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

## 2. 사회보장법의 내용

### 1) 사회보장법의 내용

-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 욕구와 문제의 발생이 다양하고 의료보장과 비화폐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까지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제도를 포괄한다고 할 때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인 동시에 대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 사회보장법은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 3. 사회보장법의 특성

### 1) 사회보장법의 특성

####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 1930년대 이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정착되어 왔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신생 독립국에 확산되었다.
- 국제조직인 ILO, WHO, 국제사회보장협회 등의 노력이 많은 기여하였다.
- 사회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였고 또한 국민 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방법

-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로 위험의 발생과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법이다.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 사회적 공동체라는 연대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운영 역시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 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도 간 연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 복지에 기여하였다.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5.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태동으로는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 1960년대 초기에는 사회보장제도나 관련법을 다루는 관련 부서나 지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

- 90년대 초에 '사회보장기본법안'이 제안되었다.
- 사회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용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 연혁

1962. 03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안통과
1962. 07. 28	'사회보장제도확립'지시각서
1963. 11. 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
1970. 02. 0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1994. 10	사회보장기본법안 국회제출
1995. 12. 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6. 07. 1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 ① 목적 :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② 기본이념 :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1)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 ①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

#### ②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③ 공공부조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⑤ 관련 복지제도

-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이다.

##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실행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국가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국민의 책임

- 사회보장기본법(제7조)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개인이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 사회보장이 개입하는 것이고 사회보장 개입에서도 언제나 개인이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3) 사회보장의 대상

- 개별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되나 포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 개념

- 제반 사회보장 제도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함을 말한다.

(2) 수급권자

- 사회보장 대상자이다.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급여수준

-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4) 급여의 신청

-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 특별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호기

- 보호 :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 담보 및 압류할 수 없다.
- 제한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예외규정을 둔다.

(6) 구상권

- 불법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정된 내용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있을 수 있는 손실과 삶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규정이다.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분야이다.

**(2) 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3) 직무**

-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검토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재원조달방안
-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사회보장 관련 기금운용방안
-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역할의 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의 참여

-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 민간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다음이 포함된 사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도 포함된다.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용자, 피용자와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공고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8)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정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이심제 설정
- 사회적 약자인 사회보장 수급자나 급여대상자들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정된 제도적 장치이다.

## 1. 국민연금법 총칙

### 1) 국민연금법의 목적 및 관장

- (1)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장 :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2) 용어 정의

-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3) 소득 :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7)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8)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9)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 (10)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 (11)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2)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3)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 3) 국민연금법의 의미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예견하여, 미리 정형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 특정한 직장 외 사람들도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노령에 대비를 한다.



- 가입대상은 일정한 연령 범위 내에 직장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입을 한다.
- 그리고 이 보험은 퇴직할 때 보통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보험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4) 국민연금의 특성

- 국민연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역시 현대사회에서 지대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그래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특성의 논의가 있으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사회보험(5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요인으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국민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 (2) 방비적 소득보장제도(사회보험에 속해 있는 제도는 모두 방비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임적 소득 보장이다.
- 이와는 반대로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에게 빈곤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여기서 두 제도의 구분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방비의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구빈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 (3) 장기보험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같은 사회보험제도라도 단기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 5) 입법배경

-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요청되는 기여금 납입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의 여건 조성이 쉽지 않아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년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서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하였다.
-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적되었다.
- 2000년에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연금정책에 새로운 요구가 부가되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연금개혁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던 중 최근 개정된 2015년 7월 29일 개정내용은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였다.
-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2. 국민연금법의 내용

### 1) 가입

#### (1) 가입대상

##### (가) 국민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그리고 국민연금에도 예외로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가입자가 연장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 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때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기존 노령계층(60세 이상 65세 미만)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이다.

(나)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된다.

(2) 가입자의 종류

- 국민연금법 상의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같은 법 제7조)

1) 가입

①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동법 제3조1항6호),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그러나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임 이사와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용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자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2/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 첫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는 자,
-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둘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셋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자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65세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연금액).
- 예를 들면 모모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였는데 60세가 되니 연금납부기간이 16년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4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자로 신청을 4년간 더 4년 동안 연금을 내고 64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된다.

### (3) 자격 취득시기 및 상실

#### ① 자격 취득시기

(가) 사업장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나) 지역가입자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 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 9조 제 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될 때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다) 임의 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라) 임의 계속 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② 자격 상실시기

(가) 사업장 가입자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끝난 때
- 60세가 된 때
- 제 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단,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나) 지역 가입자 : 다음 각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단,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단,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제 9조 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가 된 때

(다) 임의 가입자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제 10조 제 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가 된 때
- 3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단,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단,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라) 임의 계속 가입자 :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 한 때
- 제 2항에 따른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단,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③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면서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납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 이후 발생하는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는 기여금을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할 수 있다.

#### (4) 신고 및 통지

- 신고에 대한 통지 국민연금공단은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국민연금공단

①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

#### ② 공단의 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 50조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IMF 한시적 대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③ 설립 등기 :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 ④ 임원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이사 7명, 감사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시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 이사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 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 3) 실제 사례

## (1) 사업장 가입자

- 월 소득 9%(사용자 4.5% 근로자 4.5%)
- 근로시간: 시간제 근로자 60시간
- 예를 들면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사회복지사월 급여가 1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이 분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돈은 13만원이라고 하면 사용자 50%와 근로자 50% 지급되어야 하기에 75,0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한다.

## 2. 지역가입자

- 근로시간이 없다.
- 소득기준 : 자영업자, 농민 사업소득은 공적 자료(국세청자료) 농민소득 신고 기준에 의존한다.
- 국고보조금인 월 삼만 오천원으로 한다.

## 3. 임의가입자

- 주부는 임의 가입자로 보고 있다. 18세~60세는 의무 가입이다.

## 1. 급여

### 1) 급여통칙

(1)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종류가 있다.

(2)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3) 미지급의 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급여의 환수

-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②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 ④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5) 미납금의 공제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공제한 금액은 그 액수만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6) 연금액의 산정

- 의미
  -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가급 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 균일급여방식 : 최저생계비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본인이 책임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이뤄진다.
- 소득비례급여방식 : 가입자의 각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다.
- 혼합형 급여방식 :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균일급여 방식을 취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는 형태이다.

## ② 기본연금액

-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 기본연금액  $1.5(A + B)(1 + 0.05n/12)$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 월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

## ③ 가급 연금액

- 가급 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 배우자에게 연 15만 원을 지급한다.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한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 ④ 연금액의 최고한도

-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한다.

## 2)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1) 수급요건

-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지급 연령에 있어서 1998년 12월 개정법에서는 각각의 지급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점진적으로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 수급연령이 높은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연금수급자의 증가는 물론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과 선진국은 연금수급연령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급여수준의 원칙

#### ① 급여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

- 연금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가입자는 연금수급 전에 가졌던 소득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결정한다.
- ② 연금 슬라이드제
- 연금제도는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 장기간의 연금 수급 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금수준을 실질가치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 2.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1) 노령연금

#### (1)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61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3)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60세가 되었을 것

#### (4)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 2) 장애연금

#### (1)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 일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 장애연금액

-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 장애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가입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유족의 범위 등

-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하며,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배우자
-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만 해당
- 손자,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만 해당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만 해당

(3)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이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이다.
- 자녀나 손자 손녀의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이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이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부모, 손자 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1)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등

(2) 연금 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이다.
-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1) 부과방식

- 매년의 급부 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이다.

(2) 적립방식

-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연금 보험료의 징수

(1) 의의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 연금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3) 연금 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기한

- 연금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연금 보험료의 납부는 의무적이다.
- 연금 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월까지 납부해야한다.
- 농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 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4) 연금 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한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 사용자는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5) 연체금 등**

-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때
-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 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5. 국민연금기금**
**1)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잉여금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영한다.

**(3)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둔다.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 기금을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5) 기금 운영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부는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6.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 1)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7. 보칙

#### 1) 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 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 2) 대위권 등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신한다.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3) 시효

-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된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연금 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 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중단된 소멸 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제126-127조)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6조 1항).
-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7조).



##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 1) 국민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으로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 2)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3)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
  -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 복지제도이다.
- 의료급여
  - 공공부조제도 중의 하나이다.
  -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 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4)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으로는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단기보험이고 전 국민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며 보험료 납부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는 차등 부담하지만 보험급여는 균등한 혜택을 제공한다.
- 통합주의 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사회적 통합력과 연대성의 원리 및 소득의 재분배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건강보험의 입법 배경

년도	내용
1963년 12월	법이 제정되어 300인 사업자의 근로자와 농어민 대상 임의가입 형태 → 일부 시범사업만 실시
1970년대	강제적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 →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료보장사업 실시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
1997년 1월	5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적용 방식의 의료보험 실시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개정
2000년 12월 29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업하는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수급기간 제한 폐지,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

○ 건강보험의 입법연혁

년도	내용
2011	1인 이상 사업장
2011.01	사회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8.0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0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3. 07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2002. 0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1. 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
2000. 07	건강보험법 제정
1999. 02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과 공. 교 의료보험관리공단통합
1998. 1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1997. 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89. 07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전 국민의료보험 실현
1988. 07	5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적용확대
1988. 0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1. 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법 적용 확대
1979.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7. 0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486개 조합 설립)
1963. 12	의료보험법 제정

## 2.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

### 1) 적용대상

#### (1) 가입자

- 자격요건과 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자는 첫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이다. 셋째, 의료보호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다. 넷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다.
-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의 종류

#### 1) 직장 가입자

- (1) 근로자사업장 : 근로자사업장에서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된다.
- (2)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에서는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가 해당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동법 제6조 제2항)와 1인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3)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는 적용대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가 해당된다.

### 4.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의 취득과 상실

#### 1)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의 시기**

- 자격취득의 시기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이에 해당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변동일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3) 자격상실의 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5. 국민건강보험법 운영 조직**
**1) 운영조직**
**(1) 보험자**

- ① 의미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동법 제12조 및 제14조).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재정운영위원회 :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의미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이다.
-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주요 업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별
-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 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6.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

### 1) 보험급여

(1) 의미 : 요양급여, 건강진단, 임의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로 요양급여,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중에서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 (2) 요양급여

### ① 개념과 범위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하고, 검사하고, 약국에서 약 처방도 받고, 치료재료도 지급하며 치료에 대한 처치와 수술 기타 치료와 예방에 관한 사항과 재활 그리고 입원 간호 이송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요양기관

- 요양급여는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 진료소들이 요양급여 기관이다.

### ③ 비용은 일부 부담

- 이것은 바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④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면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 공단의 이사장은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약제·치료재료(이하 "약제·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심사 내용을 통보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요양비

-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건강검진

-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암 검진

- 위암 : 검진주기는 2년, 대상은 40세 이상의 남·여
- 간암 : 검진주기는 6개월, 대상은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대장암 : 검진주기는 1년, 대상은 50세 이상의 남·여
- 유방암 : 검진주기는 2년, 대상은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 : 검진주기는 2년, 대상은 20세 이상의 여성

(4) 부가급여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재정

### 1) 보험료 및 국고보조

#### (1) 보험료의 의미

-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사업자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정기적인 기여금인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국가에서 부담 국가부담액, 그리고 일부 수입가 부담의 원칙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액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보험료 산정

#####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②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부담

- 국가부담은 매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4) 보험료율

- 국가부담은 매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보험료율

-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 위원회(동법 제31조)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동법 제65조).

#####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특례

- 재정 구분계리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근로자 및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여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한다.
- 국외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재정 구분계리 기간 동안에는 앞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①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 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동법 제67조 제1항).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6) 보험료의 징수

-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동법 제62조 제2항).
- 법적으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보험이므로 보험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산권의 매각 등을 통해서라도 강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7) 보험료의 면제

-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다음과 같을 때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 단기복무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
-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 ③ 지역가입자가 다음과 같을 때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동법 제66조 제2항).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 단기복무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
  - 대학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 위 각각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 (8) 보험료의 납부

- ① 납부 의무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동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 ②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 보험료납부 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동법 제69조)
  -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 ③ 가산금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④ 결손처분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동법 제72조)
- ⑤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 오납 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과오납부액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결정

## 2.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 1)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 (1) 급여의 제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
-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2) 보험급여의 중지

- 국외에 여행 중인 때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 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때

#### (3) 부당이득의 징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4) 구상권

#####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 ② 보험급여의 면책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 (5) 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54조).
- 요양비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

###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

## 1. 산재보험

### 1) 개념

- 산업재해보험법은 1960년 11월 5일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고용주가 일하고 있는 위험부담을 결합하여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러한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보험과 차이가 있다.

### 2) 산재보험의 특성

#### (1) 무과실 책임주의

- 사용자의 공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 (2) 보험급여

-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 (3) 보험 사업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고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 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이다.

#### (4) 이중적 성격

- 위험책임을 위험과 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 보험적인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과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2. 입법 배경

### 1) 입법배경

년도	내용
1915년	'조선광업법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 제기
1853년 5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자복지법'의 제정. 공포
1963년 11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 공포
1964년 3월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
1982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사내 보험기금 제도를 신설
1995년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년 12월 31일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개정
2007년 12월 14일	전면 개정

### 3. 산재보험의 총칙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총칙

##### (1) 목적(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국가 역할(제6조)

- 산재보험의 관장은 노동부 장관이 하며, 보험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3조 1항).

##### (3) 적용범위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제6주 1항).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는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제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 주택법에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을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4. 근로복지공단

##### 1) 공단의 설립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였다(제10조).

##### 2) 공단의 사업의 수행업무

- 근로복지공단은 공법인으로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를 하고,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징수를 하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구청의 심의·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에 관여한다.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점검 및 보급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한 하고 있다.

##### 3)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31조 제1항),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제31조 제2항).

#### 5. 보험급여

##### 1)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산재보험가입사업의 근로자라면, 두

번째 조건은 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다.

- 여기서 의미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다(제5조 제1호).

## (2)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분류	내용
업무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li> <li>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li> <li>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사고</li> </ul>
업무상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li> </ul>
작업시간 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 수반에 필요한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상한 경우</li> <li>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상한 경우</li> </ul>
작업시간 외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li>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li> <li>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li>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상한 경우</li> </ul>
휴게시간 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에서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li> </ul>
출장 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li>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ul>



행사 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 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li> <li>•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ul>
기타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li> <li>•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li> <li>•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li> </ul>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제37조 제1항 제2호)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38조 제1항).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 제3항).

(4) 사망의 추정

-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 2)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다(제36조 제1항).

(2) 보험급여의 산정

-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고,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1. 급여의 종류

### 1) 요양급여

#### (1) 의의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 또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 제3항).

#### (2)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범위로는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제40조 제4항).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즉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제51조).

#### (3) 요양급여의 신청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밖에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그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고(제41조 1항),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지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1조 2항).

#### (4) 건강보험 우선적용(제42조)

-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의료급여법제7조에 의하여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고(제42조 1항), 추후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후에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42조 2항).

#### (5) 진료비청구(제45조~47조)

-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하여 공단에 청구하여 하며(제45-47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7조1항).

#### (6)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제49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에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9조).

(7) 재요양(51조)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51조 1항).

**2) 휴업급여**

(1) 의의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2조).

(2) 부분휴업급여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 기간에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4) 고령자의 휴업급여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산재보험법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3) 장해급여**

(1) 의의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57조 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있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57조 제2항).

(2) 신청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3) 재요양에 따른 장애급여**

-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애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제62조 제3항).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
-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 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6) 상병보상연금**
**(1) 의의**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3)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에 상병상태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한다.

**(4)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7)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말하고 있다.

#### 9) 장해특별급여와 유족

##### (1) 장해 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2) 유족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79조 제1항).

###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 1) 보험금의 산정기준

##### (1) 장해특별급여

-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상 현금 급여는 각각의 급여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각각 규정되고 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2) 임금변동순응율제도(슬라이드 제도)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4) 기준임금제도

-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최고·최저보상제

-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보험급여의 차등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최고보상제도도 함께 규정하여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애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산재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재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 장치이다.

(2)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를 해주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피해자의 생활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이기 때문이다.

#### 4. 산재보험의 보험료

##### 1) 보험료

##### (1) 개념 및 보험료 산정

###### ① 개념

-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보험, 행정 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 ② 보험료의 산정

-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임금총액에 관한 내용은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

##### (2)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부당이득의 징수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한다.

##### (5) 노동복지사업

-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와 함께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의 목적이므로 이를 실시한다.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

(6) 권리구제

-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 제도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 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한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1. 개관

- 고용보험이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사회보험이다.

### 1) 실업과 고용문제

- 고용보험법은 실업과 고용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다.
-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 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실업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면 알코올 중독, 고독감, 건강의 악화, 우울증, 상실감, 부부갈등, 이혼, 별거, 가출 등 사회문제로 발전해 2차, 3차 문제가 발생한다.
- 이러한 실업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 실시하고 고용보험제도가 생긴 것이다.

### 2) 고용보험제도

-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고용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시키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더불어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고용보험법의 목적

#### ○ 고용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고용보험법의 특성

#### (1) 실직근로자 생활보장과 고용대책 통합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실시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순수한 생활보장에 강조점을 두는 사회보장제도 특성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려는 직업안정기능의 확충하고,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 및 직업능력의 개발지원하며, 한계 근로자의 고용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직업안정기능을 체계화하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단계적으로 노동 시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1단계로 올바른 직장선택과 채용을 유도하고 2단계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3단계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한다.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며,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하다고도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화로 인하여 기술집약산업으로 변모해 가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1970년대 일부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노동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러나 제도의 실시여건이 미성숙되었다는 의견도 맞서면서 실시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1987년 대통령 선거 시 노태우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어 1992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경제계의 반발에 부닥쳐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인 1995년-199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 이것이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 이렇게 하여 1993년 7월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1997년 IMF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9월에 법이 개정되었다.
- 그리고 다시 199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를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 제도는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그리고 또 다시 2005년 12월에 일부 개정에서 고용안정산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됨

○ 2005년 12월 일부 개정 내용

- 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 ② 고용보험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 ③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로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④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안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하였다.
- ⑥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되었다.
- ⑦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었다.

○ 2007년 12월 일부 개정 내용

- ①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 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 ②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법제화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설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 휴가를 주도록 하되, 3일은 유급으로 2일은 무급으로 한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8페이지 6분)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했다(직장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2015년 일부 개정 내용

- 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의2 신설, 제38조).
- ②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  
가.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다.

### 3. 적용 범위

#### 1) 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대상자다.

적용 제외 경우는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5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퇴직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활동

#### 2) 적용 제외 근로자

-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② 소정(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②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4. 보험 가입자

(1)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 당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이지만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되어 있다. 즉 고용보험법이 산재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하지만 피보험자다.

(2) 당연가입자

-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임의가입

- 당연가입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노사위원회의 과반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며 임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된다.

(4) 의제가입

- 편법 방지 위한 제도다.
-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예를 들면 근로자 수의 변동과 사업규모)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그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의제 가입한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첫째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그 다음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최초의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5. 보험관계

(1) 성립

- 당연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이다. 요즘은 EDI로 사회보험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기에 개시 날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
- 다만 당연 가입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하고 있으며 임의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 되어있다(이 부분은 당연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있기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 그리고 의제가입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로 되어 있다.

## (2) 소멸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다. 임의가입·의제가입은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 시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 시기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 6. 관장기관 : 보험자

- 고용보험의 관장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다.
-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 가입 소멸, 보험료 보고, 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1999년 10월부터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장 관리, 보험료 징수, 고용보험 사무조합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그리고 피보험자신고,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업무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7. 피보험자의 관리

###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된다.
-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설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피보험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 다음 날

## (3)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피보험자격의 확인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5)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람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1. 보험급여의 종류

### 1) 고용안정사업

-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고용조정지원

-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예를 들면 사업장에 위기가 생겨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면서 탄력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채용장려금은 대학졸업 후 6개월과 실직 이후 6개월 내에 신규채용을 하면 월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대학생일 경우 45만 원 정도고 고령자인 경우 30만 원 정도다.
- 재고용장려금은 출산 후 다시 입사한 경우와 구조조정 했다가 다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역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2) 고용촉진지원

- 고령자등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관한 내용들이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말 그대로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부를 지원받은 제도다.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은 제도다.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는 기관에 여성 직원이 많이 있고 보육시설이 필요하면 고용보험에서 보육시설 기준 조건만 맞으면 시설지원과 설치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3) 기타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지원,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 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을 하고, 중소기업근로자 시간단축 지원금, 중소기업 전문 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 2) 직업능력개발사업

-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해서 훈련이나 수업을 통하여 직업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직업능력의 개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되어 있다.

### ① 사업주 지원

-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교육 내용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과 유급휴가훈련지원으로 나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업훈련전문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예를 들어 직업능력 계좌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좌제는 1인당 삼백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자격증을 따고 싶은 데 실업상태라면 계좌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국비지원을 해준다.
-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도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 ② 근로자 지원

- 이 내용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여 구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수강 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및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등이 있다.
- 수강장려금지원 같은 경우 앞에서 말한 계좌제도의 성격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강좌에 필요한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밥값과 차비는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직업전문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근로자면서 학생이면 학자금대부를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재취직을 위한 훈련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 3)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제37조 1항)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구직급여

#### ①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6개월)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그만두게 될 때는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 ②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 실업의 신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는 수급권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피보험단위기간
- 기준기간의 연장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하는 방법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2조).
- ④ 급여기초임금일액(동법 제35조)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이직 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위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이다.
- 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연장급여
- 구직급여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내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 내지 240일로 법정된 소정급여 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고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 연장 지급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 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한다.
- ⑥ 지급일 및 지급방법

- 2주간에 1회씩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 일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면 그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⑦ 급여의 제한과 반환명령

- 지급 제한은 훈련을 거부하거나 직업지도를 거부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직급여를 지급했지만 반환해야 할 경우가 있다. 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반환을 하여 한다는 것이다.

⑧ 상병 특례금 제도

- 상병급여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있다.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 취직촉진수당

① 조기재취직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고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액 중 미지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되, 여기서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다.
- 내용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개시해야 하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 그리고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그 기준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 ⑤ 급여의 지급제한

-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환수와 비슷한 내용이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 4) 육아휴직급여

### ① 육아휴직 급여요건(급여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어야 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②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③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 감액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6) 산전후 휴가급여

### ① 산전후 휴가 급여의 요건

- 산전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고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지급기간

- 산전 후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고 30일을 한도로 한다.

## 7) 비용

### (1) 보험료

- 고용보험제도의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① 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 산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고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곱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 ② 보험료의 징수방법

#### (가) 보험료의 원천공제

-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 공제. 하고 이때에는 공제계산서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개산보험료

-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 액에 해당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을 보험연도의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한다.

(다) 확정보험료

-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 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이다.

(2) 고용보험기금

- ①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 ② 실업급여의 지급 그리고
- ③ 보험료의 반환이며
- ④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고
- ⑤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고용 안정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2. 권리구제

(1) 심사 및 재심사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2) 보정 및 각하

- 심사의 청구가 제87조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권한

-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재심사의 상대방

-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 3. 보칙

(1)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 제 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멸시효

-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료징수법 제 22조 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준한다.

(3) 포상금의 지급 제도

-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하거나 위탁 및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 1. 의미

### 1)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 문제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원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제도로서,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제도에 더 하여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써 위상을 가진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장하게 된다.

####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유사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사점으로는 특별히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차이점

##### ①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치매, 중풍 등 질환을 진단하고 입원 및 외래 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며 주로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에 관한 케어를 목적으로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2)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

#### (1) 인구의 고령화 현상

-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2배인 14%(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8년이 걸리면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하다. 이로보아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의식은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 우리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노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를 해 보았더니 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 중 63.1%는 수발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수발 받는 노인의 39%는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 요양수준이 ADL(일상생활 동작)에서 QOL(생활의 질)로 변화하고 있다.
- 종래 요양의 중심적 목표는 ADL(일상생활 동작)과 IADL(일상생활 행동)의 능력범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였으나 오늘날의 요양은 ADL을 포함한 QOL과 쾌적함을 지향하는 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식구조가 변화되고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이 변화되어 가고 문화 다양화를 반영한 요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4) 노인의료비의 증가

-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래서 2000년 7월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일환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노인의료비 절감방안을 2001년 5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 (5) 경제적인 배경

-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수준은 2003년 기준,OECD 선진국(22.5%)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7.9%)으로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과 국민의료비 지출확대 및 연금 수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6) 요양보호비용의 문제

- 증가하는 요양보호노인 수와 더불어 가족들이 노인요양을 할 경우 비용부담 증가한다.
- 장기적으로 노인요양은 가족의 신체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도 제기함으로써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그래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볼 수 없어 치료목적보다는 수발 혹은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사례 증가하였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기존의 건강보험재정으로 노인 장기요양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배경이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 1)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아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 기존의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가족이 가지고 있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2) 기본이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장기요양급여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체계화

- 재가급여 우선 및 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체계화
- 노인의 심신 상태나 건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체계

### 3) 특성

#### (1) 사회보험제도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

-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사회보험제도로써 성격을 가진다.
- 그리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기반으로 하고, 일부 국가부담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 (2) 장기요양급여의 장기성과 복합성

-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고령자의 만성질환과 장애에 대응한 서비스이므로 급여기간이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또한 이 보험은 기존의 보험제도에서 발견되는 현금이나 현물과는 달리 이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급여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요양급여제공과 사례관리

-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과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사례관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입법배경

### 1) 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구조가 변화되어 핵가족화 되어 가고 그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 2) 총칙

#### (1) 기본원칙

##### ①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제공

- 노인 등의 심신 상태와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가급여의 우선 제공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의료 서비스와 연계 제공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첫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국가는 노인성 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예방 사업이나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장기요양 기본계획

-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때 포함되는 내용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 밖에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

○ 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의 구성

- 감 독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 공단
-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2조에 따른 가입자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지만, 통합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③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장기요양인정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고 있다.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신청을 하고 65세 미만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리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 등급 판정기간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5)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급권자로 판정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

(6)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시 고려사항

-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현황

(7)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최소1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9)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하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대리할 수 있다.
-

##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집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취침을 집에서 하거나 혹은 기간을 정하여 잠시 시설에 머무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도 여기에 속한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고 낮 동안 시설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한 달에 15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단기보호가 있다.
- 시설급여
  - 시설에 머물면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생활시설이라고도 한다.
  - 이곳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생활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다.
- 특별현금급여
  - 현물급여 대신에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급여 종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다.

### 1) 재가급여

-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방문요양 당시 요양보호사는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케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기록지 작성은 나이가 많거나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 그래서 2011년 07월부터 공단은 방문요양가정과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휴대폰으로 공단에서 부착해 놓은 기계에 갖다 대면 전산으로 케어의 시작과 케어의 종료를 인식하여 공단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제공기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공해야 할 서비스 품목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하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말벗,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루에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 최장시간은 4시간이고 가장 작게는 60분으로, 동거가족인 경우 1일 90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급자의 질병과 주변 환경을 종합하여 케어해야 할 시간을 정하여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는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2인 1조가 되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와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④ 주·야간보호

-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 이 서비스도 하루에 최저 3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간이란 저녁 10시까지를 말한다.
- 예를 들어 김 할머니가 3등급을 받았는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야간보호 시설에서는 아침 9시경에 가정을 직접 찾아가 수급자를 모시고 시설에 갔다가 낮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다시 저녁 5시 쯤 가정에 모셔다 드린다.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시간을 달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는 한 달 15일 이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며 일정한 시간동안 그곳에서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다.
-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외국갈 일이 있다. 그런데 약 2주동안 친척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을 경우에 단기요양기관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제외)동안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하거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기관이다.
- 흔히 말하고 있는 요양원 혹은 양로원이라고 보면 된다.
-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생활환경 주변이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곳들 또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거나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에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② 특례요양비

- 이것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는 당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③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2. 장기요양 이용절차

### (1) 방문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를 하면 건보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고 동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요양등급을 심사하고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건보공간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상정하게 된다.
- 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에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다.

### ① 장기요양인정점수

- 요양욕구와 관련된 기능 상태와 실제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수발부담)과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므로, 기능 상태와 실제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간의 관계에 있어 두 가지 개념을 보다 크게 반영하여 요양필요도를 점수로 나타내 줄 제 3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장기요양인정점수다.
- 인정점수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저하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데 요양욕구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득점 변환점수를 8개 서비스 군별로 수형분석을 통해 산출한다.



신체수발	청결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 청결관련
	배설	이동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기저귀 교환, 기타 배설관련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 준비, 기타 식사관련 서비스
	기능보조	일어나 앉기, 서 있기 연습도움, 기구사용 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기능보조
	간접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 및 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물품, 장보기, 산책, 외출 시 동행, 기타 가사지원서비스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경행위, 폭언, 폭행 등 행동변화에 대한 대처, 그 밖의 행동변화에 대응(주로 치매)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온냉 요업, 배설 간호, 의사진료보조, 기타 간호처치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알고 있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등.
재활훈련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직업치료, 기타 기능훈련이다.

## ②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 구분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1) 제공시기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급여 종류는 본인이 선택을 하여야 하며 특히 3등급일 경우에는 재가급여라고 급여 종류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심사를 거친 후 3등급이라도 시설 및 재가 급여라는 급여종류가 명시되면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1-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2)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월 한도액의 적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와 산정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6,080
	장기요양 2등급	52,040
	장기요양 3등급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장기요양 3등급	43,870

### (3) 급여의 제한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4. 장기요양기관

### (1) 지정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변경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의무와 폐업, 지정의 취소 등 안내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연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폐업이나 휴업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질문,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a)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b)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c)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적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등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산정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하지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면제가 된다.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며 시설급여 받고 있는 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며 부식비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당이득의 징수

-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이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이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고 있다.

(6) 구상권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 1. 공공부조법의 개념

### 1) 개념

#### (1) 공공부조법의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없는 사람들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공공부조법의 원칙

- 빈곤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하며 자산조사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 2) 공공부조법의 특성

### (1) 공공부조의 특성

- 공공부조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식적인 지원제도 프로그램이다.
-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 곤궁자인 절대 빈곤층이 주 대상이 된다.
- 공공부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비로 충당을 하며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다.
-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경제적인 이바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공받고 있다.
-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므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기회가 된다.
-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는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 (1)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 이 법은 '국민적 최저선'을 설정하여,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2)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으로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 및 급여내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특성

-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각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급여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한다.

**3.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하면서 여러 사회 안전망사업이 실시되었다.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 여기에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1) 2005년 12월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급여 지급의 기본 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부양 의무자의 실제 소득의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 그리고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였다.

(2) 2006년 12월 개정

-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로 자활기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2007년 10월 일부 개정

-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도 및 시·군·구 간 부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 연혁

### (1) 생활보호법의 연혁

-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였다.
-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하여지기 시작하였다.
-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 과정 수업료지원규정(대통령령 제9495호)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 사업이 펼쳐졌다.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생계구호법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1982. 12. 31. 법률 제3623호)함으로써 그 성격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취로사업의 근거 규정인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1982. 12. 31)하고 이를 교육보호로 바꾸었다.
-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을 개정(1983. 12. 30)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1984. 3. 31).
- 1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 번 대폭적인 개정(1997. 8. 22)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 1999년 9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 법 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에 실시되었다.

4. 급여의 기본원칙

1) 급여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은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기관"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충성의 원리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의 자기책임 혹은 사적자치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최대 부양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다.

(4) 타법 우선의 원칙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5) 자립조장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은 동법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를 받아들여진다.
- 동법에 자립조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활급여이지만 다른 급여의 궁극적으로 자립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이란 의존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생활하는 것이 보다 높다는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정의롭고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 (6) 무차별 평등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주관적 요건이 아닌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 무차별 평등의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평등하게 있다는 원리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 평등원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 5. 급여실시의 기준

#### 1) 급여실시의 기준

##### (1) 급여의 기본수준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듯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수급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 (2) 급여의 개별화

-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과 가구 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 (3) 세대단위 급여

- 급여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능한 한 가족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도 바람직하며, 가족구성원 중 부양 의무자를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4) 신청주의 급여

-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법 제21조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6. 수급권자와 수급자

### 1) 수급권자와 수급자

#### (1) 개념

-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고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2)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권자의 권리는 대략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반면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 보장기관

#### (1) 보장기관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다.
- 실제로는 동법에 의한 급여의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 (2)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보장시설장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의무는 첫째,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둘째,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 셋째,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 넷째, 급여를 행함에 있어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고
- 다섯째, 위탁 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 2) 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다음을 심의·의결한다.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 1) 개념

#### (1) 기준

-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내지 자활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내지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는 의료 급여법에서 따로 정한다.
-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 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2) 개념

- 급여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 급여는 현금, 물품, 신용(credit), 서비스, 힘(power) 및 기회(opportunity) 등으로 나뉘어진다.
- 기초생활보호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수급자 전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기타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다.
- 급여의 수준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더한 것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2) 급여의 종류

###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동법 제8조).
- 이는 금전지급의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다만 제10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위 조건부 수급으로서,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기초생보법에서 신설된 급여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비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반면에 빈곤의 원인으로 과중한 주거비 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 따라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으로써 주거급여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신법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1조), 기준, 지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한다.

#### (3)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 (4)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동법 제13조 제1항).
-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도 있다.

#### (5)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동법 제14조 제1항).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으로써 행한다.
-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6)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행한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를 지정 또는 결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와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저생계비를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경우에 30일)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여의 실시

-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개시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동법 제 27조 제1항).
- 그러나 시·군·구청장은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급여의 변경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급여의 중지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와 기타 관련 급여의 제공으로 통한 최저생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보장비용

(1) 의미

-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고 한다.
-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 대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일반조세를 통한 자원조달이 주류를 이루고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이 비율 역시 나라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2)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제반 급여실시 비용과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 기타 보장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

- 보장비용의 부담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한다.
-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반 급여비용과 자활공동체 비용 및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3) 교부 및 반납

- 국가는 매년 이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도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그리고 보고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4) 보장기금의 적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5) 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6)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5. 권리구제

1)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바로 신청인과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시·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2) 보장비용

-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보장비용의 부담구분으로는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와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하며,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 또한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한다.

## 1. 의료급여법의 의의

### 1) 의의

- 의료급여는 공공복지에 빈곤층이 건강을 국가 책임 하에 실현하려는 법이다.
- 수급권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이 주 대상이며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한 국민의 소득과 자활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의료급여법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양대 축과 같다.

### 2)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

-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 수용되는 점은 이미 논의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를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의 사회화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질병의 해결과 건강유지는 기본적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는 의료보장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다만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이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반대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계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악화시켜 빈곤을 지속화시킨다. 동시에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로 파악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 사업이 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현재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법이 사용되고 있다.

### 3) 입법배경

#### (1) 1997년 12월

- 의료보험의 부담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보려는 의지에서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97년 12월 (법률 제3076) 의료보호법으로 제정될 당시에는 기존의 의료보호제도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의 규정은 현재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하려고 제정되었다.

#### (2) 1991년 3월

-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변경하였다.
- 이 변경은 의료보호라는 공공부조의 뉘앙스를 급여라는 권리개념으로 전환시켜준 변경이었다.
- 내용면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하였다.

### (3) 연혁

-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제정
- 1991년 3월 8일 전문 개정
- 2008년 2월 일부 개정

## 2.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특성

### 1) 목적과 특성

#### (1) 목적

-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는 중요한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가진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의료보호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 그리고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4) 난민에 대한 특례

-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3. 의료급여법의 수행주체

#### 1) 보장기관

-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2) 의료급여심사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을 대표하는(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인 자로 구성되어 있다.

####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관

##### (1) 의료급여의 내용 등

-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로 지급,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있고 의료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급여증

-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이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개설, 설치되거나 개설,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 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업무를 위탁받는 전문기관,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하는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4)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나머지의 내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심사청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 그리고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이때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한다.
- 다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서류보존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하게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급여대상 여부 확인

-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는 비급여 비용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확인결과를 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한 비용이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한다.

- 의료급여기관이 반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과다징수액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5)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요양비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에는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이 때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

- 수급권자의 책정과정 :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보한 수급권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안의 보호기관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의료보장증의 부여
  -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5. 실시기관

- 실시기관은 의료보호 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 그 기능에 따라 보호기관,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의료보호진료기관 등이 있다.

#### (1) 보장기관

-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행한다.
-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

(2)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에서부터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이며,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의료급여는 다음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의료급여법상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데, 이들의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 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진료의견이 기재된 서식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 (1) 권한의 위임

-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의 장수권한과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

#### (2) 업무위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업무 중 다음 업무를 심사평가위원회에 위탁한다.
-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등이다.
- 그리고 시·군·구청장의 다음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즉, 급여비용의 지급,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 위의 두 가지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등이다.



## 1. 의료급여

### 1) 의료급여의 내용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을 보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 급여 대상에서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 2)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제공하지만,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2. 의료급여기간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365일로 하며,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기준에 따라 미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급여비용

### 1) 1종 수급권자 와 2종 수급권자의 차이

-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 임산부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이 법의 수급권자 중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 보건복지부 장관이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진료범위

- 의료급여법의 진료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li> <li>•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li> <li>•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li> </ul>
제2차 의료급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li> </ul>
제3차 의료급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li> </ul>

### 3) 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 당 1천 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의료급여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생활유지비 6,000 범위 안에서는 제외).
-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 당 1천 5백 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으로 전산화 단층촬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은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 1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은 부담한다.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거나 동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전부 부담한다.
-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 당 9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전부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 전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4)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리게 된다.
-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 5)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 (1) 대불과 상환

-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 할 수 있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 (2) 대불금의 독촉

-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고 대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군·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그리고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6) 의료급여기금

-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7) 의료급여의 제한

#### (1)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 (2) 급여의 변경

-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급여의 중지

-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 그리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 8) 수급권의 보호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9)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1) 부당이득의 징수

- 시·군·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군·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시·군·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고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배상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10)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1) 기금설치운영 및 감독

####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상환 받은 대불금 그리고 징수한 부당이득금과 징수한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2) 기금의 관리운용의 및 예탁

-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관리해야 하고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 업무 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의료급여기관의 업무 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 한 때,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리를 명할 수 있다.

#### (4) 과징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서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5) 소멸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 법의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법이다. 이 개선방향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언제나 급여의 사각지대로 인해 생활의 보장이 소홀히 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사각지대는 재산의 소득 인정액제도의 전면적 실시로 해소될 수 있지만, 예산증가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 둘째, 소득인정액제도는 근로자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의 저하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공제율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 셋째, 현재 자활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의 단순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만큼 생계급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산절감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된 자활사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넷째,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독특한 업무특성은 급여시설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급여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무차별평등의 원리를 침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보장업무의 분석을 통하여 업무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 1) 개념과 범위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특성

- 경제적·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다.
- 특히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배경 : 사회복지사업법 입법과 개정 과정의 연혁

-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 해방과 6.25 동란 이후 한국에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사회복지를 1960년대 중반에 와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였다.
- 최초의 입법 활동은 1966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 최근 2014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 (1)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 (2)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3)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제5조제2항 및 제15조).
- (4)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5)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 (6)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7)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제17조).

- (8)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9)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 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11)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 (12)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 (13)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 3. 내용

#### 1) 기본 사항

##### (1)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2)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4) 최대봉사의 원칙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시설설치방해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6) 사회복지의 날

-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를 말한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중복되거나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2)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아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조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 정책을 추진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조직은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주민생활 지원팀이 일선창구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더불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 더 나아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 각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 민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 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전 분야에 전문화를 가능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개념

-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로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다.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며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 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④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⑤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⑥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 복지계획 또는 시·군·구 복지계획(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

(6) 복지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3) 사회복지 인력

#### (1) 의의

-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개입기술과 지식은 물론 다양하고 많은 경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국가시험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1급).

####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증 교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에 결격될 수 있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회복지사 2급은 일정한 과정만 이수하면 주어지지만 1급은 국가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 (3) 사회복지사의 채용

##### ① 의무채용업무의 범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인력현황 규정).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등 직무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한다.

##### ② 의무채용 제외 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복지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4) 사회복지사협회

①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업무 수행은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 4) 사회복지법인

#####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할 수 있다.

##### (2) 법인의 설립허가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에 관련된 사항, 임원의 취임승낙서, 설립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3) 정관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하는 사업,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다.

##### (4) 임원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을 임면하고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재산 등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재산의 구분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기준은 법인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재산의 처분은 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 설립허가의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위반한 때

(7) 수익사업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8) 합병 등

-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고, 법인이 합병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둔다.
- 그리고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다른 사회복지법인처럼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 사회적으로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적 장치다.

(2) 설치

- 시설의 설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시설의 위탁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자유롭게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복지다원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 (3) 시설장·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4)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시설설치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를 3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다.

### (6)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7)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8) 안전점검 등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비용

###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부담 혹은 무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유료복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주류는 여전히 무료복지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보조금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3) 비용의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4) 후원금의 관리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하고, 동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1월 7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후원금의 범위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말하며 후원금의 관리는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7) 기타

(1)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허가 취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지도·감독 등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하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아동복지법의 의의

-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관심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 우리의 경우는 전쟁이라는 상처와 국가의 경제적 한계 속에서 아동복지가 긴급을 요하는 아동을 우선구제 했던 응급구호의 시절도 있었다.
-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기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 받아야 하는 것은 아동의 절대 권리이며 절대 국가의 책임이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1981년에 와서야 보편주의에 입각한 법제정이 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 이러한 의의를 가진 아동을 현대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면 구체적인 아동복지법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 현대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인정,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장기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결되어야 하는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이고 아동문제는 사회복지적 대책으로써 해결하려는 대상이며 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다.

#### (2) 아동복지의 특성

-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앞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3) 아동복지법의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60년대 초의 아동복지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 2. 입법 배경 및 연혁

#### (1) 입법 배경

-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1981년 4월에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개정된 것이다.
- 이 개정은 아동복지법이 고아 등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부분적이거나 전체 아동을 확대하는 등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 그 후 이 법은 2000년 1월에 다시 전문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목적은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변경된 이유는 첫째, 모든 아동을 복지대상으로 표방한 것이고 둘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며, 넷째,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2014. 11. 24 일부개정에서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 (2) 법의 연혁

- 1961. 12. 30 아동복지법 제정
- 1981. 04. 13 아동복지법전문개정 - 아동복지법에서 명칭변경
- 2000. 01. 12 전문개정
- 2008. 02. 29 일부개정
- 2014. 11. 24 일부개정

## 3. 내용

### 1) 기본이념

-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책임주체

#### (1)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고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녀야 한다.

####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에서는 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사항 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와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 위촉하는 15인 이내가 위원이 된다.

###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 5)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이 법은 아동에 대하여 누구든지 다음의 11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 (1)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6) 자신의 보호 하거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11)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절대적 금지행위를 규정해 두고 있으며, 위반한 자는 위법사유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6) 실천기관

- (1)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아동복지지도원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아동상담소에 각각 1인 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다.
  -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 혹은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와 집단지도 및 그 알선이다.
  -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혹은 지도 및 감독
  -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혹은 지도 및 원조
  - ⑧ 기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아동위원

-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4) 기타

- 아동복지를 위한 기관은 보건소 및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후술하는 아동복지시설 부분에서 상론한다.

**7)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① 아동복지지원 또는 아동위원회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혹은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②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⑤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1) 설치

-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 이고,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 종류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이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호보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은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3) 업무와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WE센터, 청소년 상담소)
-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의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 아동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들 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9)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의

-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 1577-1391번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의무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례를 들어 보면, 15살 김00양은 늦은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마자 폭행을 당했다. 손으로 입을 찢었고 발길로 찹으며 이리저리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다녔다. 허리뼈가 부러지고 실신한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 후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아동전문기관인 공동생활가정에서 학교를 다녔다.

(6) 보조인의 선임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11) 비용

(1) 비용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비용을 보조할 경우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세

-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노인복지법 의미

###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는데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이 그것이다.

####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인데,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특성

#### (1)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2) 특성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 2. 입법배경

-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 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되었다.

○ 1981년 노인복지법의 내용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양양하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토록 하였다.
  - 65세 전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 산업의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보급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경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 이렇게 법제화된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이 중요한 변경내용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 실비, 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였고, 요양보호사의 공인된 국가 자격인정을 포함하였다.

### 3. 내용

#### 1) 총칙

##### (1)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 가족제도의 유지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 복지실시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주체가 된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상담원

-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가. 임용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구청장·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한다(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직무

-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 법 제28조의 규정(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다. 보수 : 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 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로 위촉지역봉사의 임무를 한다.

○ 지역봉사의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 충효사상 전통예의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 경로우대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 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건강진단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치매관리사업(치매상담신고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치매관리사업의 업무내용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입소 안내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노인재활요양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중산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유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기업까지도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기능

-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②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기능

- 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기능

-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② 종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있다.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 또한 노인휴양소는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재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능

- 노인들이 자신이 사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②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이 있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며,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한때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또한 방문 목욕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및 복지용구를 포함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노인보호 전문기관

① 기능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세업무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의 현장에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
- 학대받은 노인이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

① 개념과 교육

-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보건복지 등의 케어(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설치

-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변경,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중 보건복지부령이 종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3월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탁의무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① 조사 및 검사

-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이 같은 감독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사업의 정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가족봉사원교육기관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락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비용수납규정(동법 제46조 제5항, 제6항)에 위반한 때
-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락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비용수납규정(동법 제46조 제5항, 제6항)에 위반한 때
-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 1) 장애인의 문제

- 장애의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normalization)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불편 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 구조적 여건의 조성 and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 2)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다.

###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동법 제1조).

## 2. 입법배경

-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그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107회 국회(임시)에서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최근개정으로는 2013년 10월 31일 개정되었다. (내용추가)현행법상 장애인생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물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인증취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 3. 내용

### 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 (1) 기본이념

-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지원해야 한다.

(4) 사회연대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개념의 기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3) 기본 시책 강구

#### (1) 의미

- 포괄적 장애인복지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 장애인복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복지조치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 (2) 장애발생예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의 원인에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추진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재활정책의 강구

-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4)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내용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것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편의시설의 설치와 안전대책으로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더불어 선거권 행사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4) 실천의 주체

##### (1) 실천기관과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은,
  -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②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 ⑥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장애인복지상담원

- 장애인이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는,
  - 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하고
  -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하며
  - ③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이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하고
  - ④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 에 관해 지도하며
  - 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하고
  - ⑥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하며
  - ⑦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한다.
  - ⑧ 기타 장애인이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4)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및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5) 복지 조치

#### (1) 조사 및 장애인등록

##### ①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동법 시행령 제14조)
  - ㉠ 성별·연령·학력·가족 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 장애 유형·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 ㉢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 재활보조기구 사용·복지시설 이용·재활 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요구 등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 ㉤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
  - ㉥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 상황에 관한 사항
  -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장애인등록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이 법상의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 ①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과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 ③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과
- ④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이며, 복지조치 이외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의료재활

-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교부·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4) 교육재활

-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직업재활

-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의 결과,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사업 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회경제적 재활

① 자금의 대여

-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생업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시설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산품의 구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우선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세제감면, 식별표지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장애수당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다.

## 1.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의의

### 1) 한부모 가정의 문제

-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모자가정에서 모부자가정으로 불리어왔던 개념을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으며 실정법상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했고, 한부모가족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며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모자가정이 겪는 문제는 첫째, 경제적 문제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이다. 둘째, 정서적 문제로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의 문제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로 자녀의 교육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역할 재조정 문제에 직면한다.

### 2) 한부모 가정의 개념

- 한부모가족복지는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다.

## 2. 입법배경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 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 ① 급여의 개선(최저생계비 보장, 아동수당제도의 선별적 도입)
  - ② 자립기반의 확립(모자복지기금 대부제도 마련, 직업훈련의 실용화, 생업지도 및 취업알선 체계화,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지원, 주거 문제 지원)
  - ③ 접근서비스의 확대
  - ④ 전달체계의 수립 등의 정책제안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정책제안은 모자복지법의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 이러한 배경으로 1988년 12월 9일 신영순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무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2월 18일에는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까지 기존의 모자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 최근 개정 2015년 7월 1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②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③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함(안 제12조).
  - ④ 가족지원서비스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추가함(안 제17조제5호 신설).
  - 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함(안 제17조의2 신설).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재분류함(안 제19조)

### 3. 내용

#### 1) 한부모지원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 (1) 한부모지원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즉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 (2) 기본원칙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모자가정의 자립노력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적용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정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적용대상자로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③ 미혼자
- 또는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동법상의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는 동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자가 된다.
    -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질병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마지막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이 동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는 보호대상자가 된다.
  -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3) 실시기관

#### (1) 보호기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를 행하는 책임주체로서 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2) 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곳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 4) 복지조치

#### (1) 복지 급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복지급여를 여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 복지자금 대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1항).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복지자금의 대여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고용의 촉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고용지원 연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1호에 따른 작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5)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6)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증진서비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8)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에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 개념

-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서 한부모가족이 가진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을 보완하고 때로는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설치와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류

-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기간동안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③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④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⑤ 미혼모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⑥ 미혼모 공공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⑦ 모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⑧ 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⑨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⑩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⑪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⑫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수탁의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 감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6) 비용

### (1) 비용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 (2) 부정 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3) 보조금 반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①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 중지 등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7)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 청구

### (1) 수급권의 보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27조).

### (2) 심사청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은 위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 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조 1항

제19호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재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그 가정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미흡, 가족기능의 약화, 빈곤과 주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의 기능이 조사, 지도, 시설입소의 상담만으로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상담소에 전문 인력이 다수 배치되어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심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달체계로 변해야 한다.

(2) 복지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동법 제13조의 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생업자금의 대부는 상환조건이 복잡하다.
- 그리고 대부금액의 불충분함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대여복지자금을 운영해야 한다.

(3)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일률적인데 모자가정에서 겪는 문제와 부자가정에서 겪는 문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지속적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차별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는데, 경제 사회적 발전과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기능이 가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단적인 증거가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해 아동 보육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 보육의 기본이념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책임주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영유아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것이며,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해결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2. 입법 배경

- 산업화되면서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여성노동인력을 사업현장으로 흡수되었고, 이러다보니 아동을 돌보아야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탁아육구의 증가는 근본적인 제도적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탁아사업을 실시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시설 이용대상자 대부분은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 구호 성격에 벗어나지 못했다.
  - 그래서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과거의 구빈 사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과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 또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에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게 되자 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자 1987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서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단체 등이 보육에 관련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 제정·공포하여 그해 8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며 종전에는 단순히 "탁아"사업이었으나 입법화됨에 따라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되었다.
  - 최근 개정 2015년 1월 1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 ①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제14조제1항).

-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14조제2항)
- ③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방법을 강화함(제14조의2)
- ④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함(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 3. 내용

####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대상자

##### (1) 목적

- 보호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더불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들이 영·유아 탁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 (2) 책임주체와 대상자

- 영유아보육의 공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민에게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또한 이들이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서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 영유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 입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비의 보조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 2) 전달체계의 구성

#####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위원회는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고 보육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하며,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과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 하는 자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3) 보육정보센터

-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구 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중앙보육정보센터장과 지방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 요원 등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4) 보육개발원

-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뿐만 아니라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에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5) 어린이집연합회

- 영유아의 보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보육 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있으며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연합회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도 하고 홍보와 영유아의 권익보호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기타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 (6) 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어린이집 설치

#### (1) 어린이집의 종류

- ①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④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⑤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⑥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⑦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따른 시설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놀이터를 설치하려면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육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 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4)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에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보육교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학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집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 5) 어린이집

##### (1) 운영기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혹은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혹은 단체 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되고 있다.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어린이집장과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학부모 대표 및 그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 (3) 입소대상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주위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장된 보육이라고 할 수 있다.

####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린이집장은 영유아 혹은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를 취약보육이라고 하고 있으며 취약보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그리고 시간연장형보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영아보육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장애아보육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시간연장형보육은 기존보육시간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육의 우선제공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와 ②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와 ⑤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들을 말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을 설치하고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보육과정

-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화된 보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어린이집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서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생활기록

- 어린이집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영유아들의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계하여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2011년에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자는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에 관련된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8)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장은 영유아에게 질병과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급식관리는 어린이집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급식에는 유통기한도 포함되어 있다.

## 6) 비용

### (1)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2011년에 개정된 양육수당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비용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해 개정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2)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 교사의 인건비와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3) 사업주의 비용부담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4) 보육료수납 방법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당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5) 세제 지원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받는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받고 있다.

## 7) 지도 및 감독에 관련된 법 조항

(1) 지도하고 명령 및 보고 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 폐지 혹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 폐쇄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와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4)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의의와 입법 배경

### 1) 의의

-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직접 급여를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 평등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부각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단만 있는 동네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 종합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 운영을 보다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설물 이용에서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들이 국민에게 확산된다면 일반인과 함께 하는 평등한 삶이 보장됩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정상화 이념들과도 일치합니다.

### 2) 입법 배경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교통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에 편의시설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구조 및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 후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했었고 1994년 12월에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편의시설 설치규칙은 적용범위가 장애인에 한정되었고,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총체적인 법률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1996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4월 10일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그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다.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제9조의2 신설)

- 1)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2)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외에 공원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 2. 목적

-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국가의 일방적인 사회부조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의증진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이며 불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하며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에는 손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화장실보다 넓은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바로 편의증진시설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 3. 내용

#### 1)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및 책임주체

- 기본원칙은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권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체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이러한 개념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 편의증진법에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니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데,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종류는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공공이용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합니다.
- ③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열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열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고, ④ 통신시설은 우체통과 공중전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⑤ 기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의 의무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설치의 지원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합니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각종 시책 준비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②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의무
  - 시설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함에 있어 그 시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③ 실태조사 실시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④ 실태조사 실시 의무
  - 시설주관기관은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⑤ 편의 증진 시설의 설치, 지원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합니다.
- ⑥ 연구개발의 촉진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하고 외에도
  - 지도·감독의무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 명령 등이 있습니다.

## 5) 지도 감독 및 지원

### (1)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사해야 하며,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설치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 ①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 ② 대상시설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의 경우 혹은 교통수단 구입 등의 경우 편의시설설치계획,
  - ③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 ④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6) 적용 완화와 편의 제공

### (1) 적용완화

- 시설주는
  - ①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②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2) 시설 이용 상의 편의 제공

- 장애인 등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		의무비치용품
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 업무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팩스) 및 보청기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 모사전송기 및 보청기
	공공도서관	보청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점자 업무안내책자,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 보조기 등을 말합니다.

**(3)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요청 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그리고 편의제공 대상시설 종류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동도서관,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⑤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복지시설, ⑥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4)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권장시설은 기숙사, 슈퍼마켓, 아동관련 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등입니다.
- 발급대상자는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 다만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7)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편의 증진심의회에서 하고 있는 심의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에 수립과 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 편의증진심의회 구성**

-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합니다.
- ③ 위원은 정부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8) 이행강제금**

-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합니다.
-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1. 의의와 입법배경

### 1) 의의

- 전통사회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에서 부부싸움이나 자녀 체벌 등은 가족 내의 문화로 여겨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전통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은 부부간의 폭력과 자녀폭력 혹은 부모폭력 등이 위험수위에 왔고 더는 가정 내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법적 장치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언급되었으나,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문제로 최근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족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 2) 입법 배경

#### (1) 입법 배경

- 1994년 5월 :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시작하였다.
- 1997년 12월 31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 1999년 :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되었다.
- 2006년 4월 28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개정되었다.

#### (2) 개정이유

- 법이 제정 되었으나 10여 년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미약하여 이 법 입법 취지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고 결국에는 2006년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보완하였다.
- 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종전에는 이 법은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3) 개정된 주요 내용

- 여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 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하였다.

-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에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련된 법의 근본적인 목적

-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라 함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행위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자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그리고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있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3. 내용

### 1) 책임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첫 번째 조치는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며 교육도 하고 홍보
-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예산상의 조치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서비스 차원

### (1) 가정폭력 실태조사

-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예방교육

-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취학 지원 및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긴급전화 설치 운영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자의 신고를 신청 받거나 상담하고 관련 기관과 시설을 서로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긴급전화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며 번호는 1366번이다.

(5) 법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 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6) 치료보호에 관련된 내용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과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등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 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3) 가정폭력에 관련된 복지시설

#### (1) 가정폭력 상담소

##### ① 설치하고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담소의 설치기준이나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상담원 인원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 ② 업무

-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을 한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 임시보호기간에 관련된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이다.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이다.
-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한다.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①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② 보호시설의 종류

- 시설의 종류 중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를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③ 보호시설의 업무

- 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며,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을 해주고,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을 해주며,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을 해주고,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에 관련된 사항으로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위 업무에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求償)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 ④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 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혹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로서 위 사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 그리고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않는데 그 이유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 ⑥ 보호시설의 퇴소

-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다.
-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리고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위 사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3) 상담원 자격과 교육훈련시설

#### ① 상담원의 자격기준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될 수 없고, 상담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상담소·보호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면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리고 법률구조법인 혹은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과 교육훈련시설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의 지도감독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과 교육훈련시설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쇄하거나 업무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인가 취소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와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를 말하며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여져 있고,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가정폭력피해자 관련시설의 경비 보조 및 통합설치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금지 사항**

(1)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2) 비밀엄수의 의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유사명칭 사용금지

- 이 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